

# 대형마트 농산물 날개 판매 확대

농식품부 5개 대형마트 협조 판매 가능한 농산물 지속 발굴 “무포장 형태 유통 정착 기대”



대형마트에서 양파를 날개로 판매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대형마트의 농산물 무포장·날개 판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개 대형마트와 협조해 ‘농산물 무포장·날개 판매’를 20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산물 무포장·날개 판매에 참여하는 곳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 GS더프레시 등 대형마트 5개사 1481개 점포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소량, 날개 단위 구매를 원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대부분 마트에서는 농산물을 여러 개 포장한 형태로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선택의 폭이 좁고, 필요한 수량 이상 농산물을 구매하는 등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 또 농산물을 별도 재포장에 유통·판매하는 과정에서 포장재 등 폐기물도 부수적으로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17일~23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17개 시도별 5개 대형마트

96개 점포와 협력해 양파 날개 판매 시범행사를 추진한 바 있다. 소비자단체와 협조해 현장 반응을 살펴본 결과 소비자는 가구 사정을 고려한 소량 구매 가능, 폐기물 저감 등의 이유로 양파 날개 구매를 선호하며, 향후 날개 구매를 확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산물 전반으로 무포장·날개 판매를 확대할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한 소비자의 긍정적 반응을 고려해 양파 등 농산물의 무포장·날개 판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는 20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에 방문해 양파, 파프리카 등 농산물을 날개로 필요한 만큼만 구매할 수 있으며, 정부는 마트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무포장·날개 형태로 판매 가능한 농산물을 지속 발굴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중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농산물 무포장·날개 판매 전국 확대를 계기로 국산 농산물의 무포장 형태 유통이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소비자는 필요한 만큼만 농산물을 구매해 가계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말뿐인 안보·보훈... 北 두려움 떨쳐야



문형철 기자의 어수선하루

한국전쟁(6.25)과 제1·2차 연평해전이 발생한 6월이다. 여·야 모두 철맛은 장사치 마냥 ‘안보’와 ‘보훈’을 외친다. 그렇지만, 군내에는 북한을 무서워하는 이들이 남아있다.

조소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제1차 연평해전’ 기념일인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제1차 연평해전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전사자는 없었다. 전사자가 발생한 것은 이보다 3년 뒤인 2002년 6월 29일의 ‘제2차 연평해전’이다.

북한 해군이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하자 참수리 357정은 맹렬히 맞서 싸웠다. 하지만 정장 윤영하 소령(전사후 추서진급)을 비롯한 6명이 전사했다. 당시 2002 한 일월드컵 분위기로 이들의 헌신은 조용히 다뤄졌다. 보수·진보 어느 진영도 이들의 희생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2017년 연말에 서야 이들의 대우가 순직자가 아닌 전사자로 인정됐다.

국방부는 2018년 6월 29일 ‘제2차 연평해전’을 기리는 기념물을 제작하면서 전사자를 모욕했다. ‘전사자’를 ‘순직자’로 표기했기 때문이다. 당시 국방부출입기자였던 기자는 이 문제를 국방부 대변인실에 전했고, 입장을 기다렸지만 그들은 침묵했다. 기사 최종 송고 전, 국방부에 입장 수정해야 할 부분 등을 다시 물어도 반응은 같았다. 기사가 송고된 후 당시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기지를 대변인실로 끌고 갔다. 기자의 항거에도 기사는 결국 내려졌다. 그 해 7월 몇몇 시민들은 전사자를 순직자로 표기한 것을 지적한 기사의 삭제 배경을 묻는 민원질의를

‘국민신문고’에 올렸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기사의 수정요청을 한 것 일뿐이라면서 ‘사실과 다릅니다’는 입장만 밝혔다. 국방부 대변인실이 대한민국 시민보다 정권과 북한이 더 무서운 조직이란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닌 듯 하다.

국방부 대변인실의 것은 이어지는 행보도 재미있다. 같은 달 27일 국방부는 휴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아해 기념물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긴급히 삭제했다. 삭제된 기념물에는 국방부의 입장에서는 내걸 수 없는 문구가 있었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3년여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된지 올해 65주년입니다”라는 이 문구는 군 안팎에서 논란을 키웠다. 휴전선 이북의 영토를 다 수복하지 못했기에 틀렸다고만 할 수 없지만, 군의 사기를 생각해야 하는 국방부가 쓸 문구는 분명 아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문구는 문화체육부 정책 자문 기자단의 한 기사가 쓴 것으로 자체 검증은 거친 것”이라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말을 꺼냈다. 국방부가 문체부 기자의 말에 휘둘릴 정도라면, 얼마나 문약한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던 2020년 6월 25일에도 국방부는 ‘북한’이라는 주어는 빼 채 추모 기념물을 페이스북 등에 올렸다. 이 정도면 국방부 대변인실은 마마, 호환보다 북한이 무서운게 확실해진다. 군의 대적관을 흐드는 갈대들이 장병의 정신교육을 담당하는 주요직위자로 아직도 남아있다. 당시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정전지원장이 됐다. 민원질의에 답변한 관계자는 대령으로 진급했고, 기지를 대변인실로 끌고간 부대변인은 올해 하반기 장군인사에서 육군 정훈공보실장에 내정될 것이라던 말이 벌써 돌고 있다. 갈대는 사라지고 곧은 대나무가 무성하길 바란다. captinm@

## 고용노동부, ‘제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 영세사업장 4대 기초노동질서 지도·점검

(근로계약서 체결·임금체불 등)

음식점·편의점·카페 중심 현장점검 “위반사항 적발 시 적극적 시정 조치”



20일부터 카페와 음식점, 편의점 등 영세 사업장 대상으로 근로계약 체결 여부, 임금체불 등 현장 점검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0~24일 소규모 영세 사업장 대상 4대 기초노동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집중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4대 기초노동질서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과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이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 때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 많은 음식점, 편의점, 카페 등을 중심으로 지도와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하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노무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 분기 마지막 달 넷째

주에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있다”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완화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편의점 등 단기 아르바이트 등 청년 고용이 많은 사업장 중심으로 현장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 사항 적발 시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4대 기초노동질서는 노동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돼야 할 사항”이라며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 농식품부, FAO서 韓 스마트팜 기술 소개

(유엔 식량농업기구)

이사회 참석... 회원국 협력 등 논의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우크라이나 농업 재건과 회복을 위한 투자필요액 평가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부터 5일간 열린 제170차 유엔 FAO 이사회에 참석, 지난 4월 특별이사회 이후 식량안보에 대한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의 영향 등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이사회는 FAO 본부가 있는 이탈리아 로마 현장과 영상회의로 병행 개최됐으며, 49개 이사국을 비롯해 참관국,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현장과 화상회의로 병행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FAO는 우크라이나 농업 재건과 회복을 위한 투자필요액을 평가하고, 우크라이나와 인근 국가의 동물건강 관리, 50개 취약 국가에 대한 식량 불안정성 평가, 효율적인 비

료 사용을 위한 토양지도 도입, 식량수입 금융기구 설립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사국들은 이러한 FAO 제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식량 교역이 감소하고 곡물 가격이 급상승해 최빈국과 개발도상국이 심각한 식량 불안을 겪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회원국 간 협력 강화 등 FAO의 적극적이고 선제적 역할을 주문했다.

한편, 우리나라 대표단은 FAO의 두 전략이 지속가능한 식품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대책이며, 우리나라도 과학과 혁신을 활용해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관련 기술 개발과 농축산물 유통의 물류 자동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 정부, 밀 수급안정 나선다... 22일부터 금강 등 4개 품종 수매

농식품부 수매 계획물량 전년 두배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밀 수급안정을 위해 2022년산 국산 밀 정부수매를 6월 22일~7월 20일까지 약 1개월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산밀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유도하고 소비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산밀 정부수매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 수매 계획물량은 전년 매입량(8401톤)보다 102% 늘어난 1만 7000톤 규모다.

수매품종은 금강, 새금강, 백강, 조경 4개 품종이며, 수매가격은 민간 매입 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양호’ 등급

기준으로 40kg 당 3만 9000원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밀 생산농가 편의성과 국산 밀 품질 제고를 위해 매입 방식을 개선한다. 우선 밀 수확 이후 농가의 건조·보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수매시기를 전년보다 1개월 이상 앞당기고, 20일 이상 소모되던 사전품질 검사(단백질 분석 등)도 검사방법을 개선해 7일 이내 가능하게 했다. 또, 밀 생산농가·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수매대금의 50%를 지급하던 중간정산금을 올해부터 90%까지 높여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도 전체 매입 완료 직후 조기 지급한다.

아울러 밀 건조시설이 부족한 농가

에서 수확한 밀을 인근 지역농협의 건조시설을 이용해 건조하고, 건조 즉시 품질검사를 거쳐 정부가 수매하는 방식인 밀 산물수매를 시범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전국 지역농협과 생산단지를 대상으로 산물수매 참여 여부를 협의했고, 최종 4개 지역농협과 약정을 체결한 생산단지 물량에 대해 산물수매를 추진키로 했다. 이번 산물수매에는 98개 농가가 참여하며 매입물량은 1032톤이다. 정부는 시범 추진하는 산물수매의 원활한 추진과 밀 품질관리를 위해 검사인력과 장비를 최우선으로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